

CEO Brief는 보험산업 관련 이슈를 분석하여 보험회사 CEO와 유관기관의 기관장분들께만 제공되는 리포트입니다.

■ 해약환급금준비금 주요 현안과 개선 과제

요 약

해약환급금준비금은 시가평가 보험부채가 해약환급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액을 이익잉여금 내에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임. 다만 자본 항목인 이익잉여금을 경유하는 구조로 인해,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증가는 배당 제약·기본자본 감소·법인세 이연으로 이어질 수 있음. 최근 해약환급금준비금 규모의 급증으로 이러한 영향이 크게 확대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제도 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기준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기본자본 인정 기준을 정비하되, 장기적으로 해약환급금 부족에 대한 관리 수단을 지급여력·유동성 체계로 이전하여 계약자 보호 기능을 과세·배당 등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 과정에서 법인세 부담, 자본유출에 따른 건전성 영향, 사업비·계리적 가정에 대한 감독기준과 검증 절차의 실효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1. 제도 현황

○ IFRS17·K-ICS 도입 이후 보험부채는 시가로 평가되는 반면, 해약환급금은 원가 방식으로 평가하므로 두 금액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IFRS17·K-ICS에서 보험부채는 보험료, 보험금, 사업비 등 미래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사망률·해지율 등의 계리적 가정과 시장금리를 반영하여 평가 시점 현재가치로 측정함
- 해약환급금은 기초서류상 예정이율로 측정한 계약자적립금에서 표준해약공제액을 한도로 해약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 계약 체결 이후 금리 상승·신계약비 집행 등으로 시가로 평가된 보험부채가 해약환급금보다 작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해약환급금준비금(이하 '준비금')은 해약환급금이 시가평가 보험부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해약환급금 부족액)만큼 이익잉여금 중 일부에 배당 제한을 부과하여 사외유출을 제한하는 제도임

- 해약환급금 부족액이 배당 등을 통해 사외유출될 경우 대량해지와 청산 시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해당 금액을 이익잉여금 내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함
- 다만 준비금은 별도의 현금성 자산으로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이익잉여금 중 해당 금액만큼 처분제한을 부과하여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됨
- 이를 통해 준비금은 회계제도 전환 및 금리 상승 등에 따라 보험부채의 평가 차익이 사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짐

○ 준비금 적립 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기본자본·배당·법인세 등에 대한 영향도 커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 보험산업의 준비금 규모는 2023년 34조 원에서 2025년 53조 원으로 증가하였고, 2025년 이익잉여금 내 준비금 비중은 생명보험회사 47%, 손해보험회사 45%이며, 일부 회사의 경우 90%를 상회함
- 준비금이 자본 항목인 이익잉여금 내에 적립됨에 따라 적립액의 증가는 기본자본 감소, 배당 제약, 법인세 이연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이에 따라 지급여력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회사에 대하여 준비금 적립 비율을 80%로 낮추는 개선 방안이 2024년 시행되었으나, 적립 규모는 이후에도 확대됨

2. 주요 현안

○ 준비금 제도는 해약환급금 확보 외에 다른 목적의 규제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음

- 해약환급금 부족액에 대한 관리가 자본 항목인 이익잉여금의 처분제한을 통해 이루어지면서 준비금 제도가 배당 제한, 기본자본 인정, 법인세 이연, 신계약비 통제 등 여러 규제와 결합됨
- 이에 따라 특정 기능에 초점을 맞춰 제도를 조정하는 경우, 다른 영역에서 의도하지 않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 손실흐수성이 높은 자본을 보유하더라도 준비금으로 인해 기본자본이 감소할 수 있음

- 해약환급금 부족액 중 준비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기본자본 인정액에서 차감되어 보완자본으로 처리됨
- 초과분에는 해약환급금 부족액 대비 이익잉여금이 부족하여 적립하지 못한 금액 외에도 준비금 산출 기

준과 K-ICS 가용자본 산출 기준 간 평가 차이에서 발생하는 CSM 상당액 등이 포함됨

- 이에 따라 이익잉여금 대비 해약환급금 부족액이 큰 경우, 보통주 지분 등 손실흡수성이 높은 자본을 충분히 보유한 회사라고 하더라도 기본자본이 감소할 수 있음
 - 해약환급금 부족액 중 보완자본으로 재분류된 금액은 2023년 대비 2025년 생명보험회사 13.1조 원, 손해보험회사 6.2조 원 증가함
- 보완자본으로의 재분류는 전체 가용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기본자본을 감소시키므로, 2027년 기본자본 비율 규제가 도입됨에 따라 준비금이 직접적인 자본 부담으로 전환될 수 있음

○ 적립액의 급증은 단기적으로 법인세 납부액을 감소시키며, 제도 개정에 따라 준비금이 환입되는 경우 세 부담 충격이 발생할 수 있음

- 준비금은 이익처분에 의한 적립을 조건으로 손금에 산입되어 법인세를 이연시키며,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법인세 부담을 낮출 수 있음
- 적립 기준의 완화 등 준비금 제도의 개정으로 이전에 적립한 부분이 단기간에 환입되면 이연되었던 법인세도 단기에 실현되어 법인세 부담이 집중될 수 있음

○ 준비금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되므로, 이익잉여금 대비 준비금 규모의 확대는 배당 여력을 축소시킴

- 준비금 제도는 회계제도 전환·금리 상승에 따른 기존 계약 평가 차익이 사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나, 적립 의무는 계약 시점과 무관하게 적용되어 신계약에 대응하는 준비금도 함께 누적되면서 배당 여력이 지속적으로 축소됨

○ 높은 신계약비가 계약 초기에 집행되면 보험부채는 줄어드는 반면 해약환급금은 변하지 않아, 신계약비의 증가는 준비금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 해약환급금 산출 시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하는 해약공제액은 표준해약공제액을 상한으로 하며, 표준해약공제액은 순보험료와 보장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신계약비가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음
- 이러한 구조가 사업비의 확대를 간접적으로 억제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준비금 제도 도입 이후에도 신계약을 중심으로 사업비가 증가하는 등 실제 사업비를 통제하는 효과는 제한적임

3. 개선 과제

○ 준비금 제도의 개선은 준비금에 연결된 서로 다른 목적의 규제를 목적에 맞게 분리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는 현행 준비금 체계를 유지하면서 적립 기준과 기본자본 인정 기준을 합리화하여 제도 운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으로 해약환급금 부족액에 대한 관리 수단을 지급여력 및 유동성 관리 체계로 이전하여 계약자 보호 기능을 과세·배당 등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두 방안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므로 중장기적 제도 개편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단기적인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단계적 접근이 현실적임

○ 현행 제도는 보유 계약의 대부분이 해약되는 상황을 기준으로 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어, 적립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준비금 제도는 대다수 계약이 해약되는 상황을 상정하여 해약환급금 부족액을 산출하고, 지급여력비율 수준에 따라 부족액의 80~100%를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
- 반면 지급여력제도에서는 ‘대량해지위험액’을 산출할 때 대량해지가 일시에 발생하는 극단적인 손실 상황으로 계약의 25~35%가 해지되는 상황을 적용함
- 준비금 역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부족액 전액이 아닌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단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해약환급금 부족액 중 이익잉여금 초과 부족액의 기본자본 인정 기준을 합리화하여 기본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초과 부족액 중 준비금 산출 기준과 K-ICS 가용자본 산출 기준 간 평가 차이에서 발생하는 금액은 낙관적 계리적 가정을 통해 K-ICS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평가에 근거하여 보완자본으로 분류됨
- 다만 계리적 가정에 따른 자본 변동성 관리는 해지환급금을 확보하려는 준비금 제도와 목적이 다르므로,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준비금 적정성 검증, K-ICS 가용자본 산출 기준의 명확화 등 감독기준과 검증 절차를 통해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급여력제도는 요구자본에서 대량해지에 따른 순자산 감소를 자본으로 보전해야 하는 손실로 인식하므로, 가용자본 일부가 해약 시 지급금에 활용된다는 이유로 손실흡수성이 제한된다고 평가하는 것

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함

- 이를 고려하여 해약환급금 부족액 중 재분류되는 금액에 일정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해약환급금 부족에 대한 규제를 지급여력제도와 유동성 관리 체계로 이전하여 계약자 보호 기능을 과세·배당 등과 분리할 필요가 있음

- 대량해지에 따른 손실은 요구자본의 대량해지위험액 산출 기준을 정비하여 관리하고, 대량해지에 따른 대규모 현금유출 영향은 유동성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ORSA와 유동성 관리 기준, 공시 등에 반영하여 관리할 수 있음
- 다만 ORSA, 유동성 관리, 공시체계를 통한 관리는 현행 제도보다 강제력이 약할 수 있어, 일정 기준 미달 시 위험관리 개선 조치와 연계하는 등 보완 방안이 필요할 수 있음

○ 제도 개정 과정에서 법인세 부담·건전성 영향·사업비와 계리적 가정 등에 대한 관리 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준비금 제도 개정에 따라 기적립분이 환입되는 경우 이연되었던 법인세가 단기에 집중적으로 실현될 수 있어, 익금산입 분할·세금 분납 허용 등 경과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제도 개선으로 확대되는 재원이 배당 등으로 유출되더라도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배당 후 지급여력 분석 등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준비금 적립 규모는 사업비·해지율·할인율 등에 의해 큰 영향을 받으므로, 준비금 제도의 완화는 이들에 대한 위험관리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최우석 연구위원, 노건엽 연구위원

woosukchoi@kiri.or.kr, gynoh@kiri.or.kr



Key Issues and Reform Priorities for the Surrender Value Reserve

ABSTRACT

The surrender value reserve restricts the distribution of retained earnings by an amount equal to the shortfall when insurance liabilities measured on a current-value basis fall below surrender values. Because the reserve operates through retained earnings, its rapid growth may amplify its impact on dividend capacity, Tier 1 capital recognition and corporate income tax deferral, strengthening the case for reform. In the short term, reserve accumulation requirements should be adjusted gradually and Tier 1 capital recognition criteria refined. Over the longer term, surrender value shortfalls could be managed through solvency and liquidity frameworks, separating policyholder protection from tax and dividend rules. Reform should also take into account the corporate income tax burden, the prudential implications of tax payments and dividend distributions, and the effectiveness of supervisory standards and validation procedures for expense, lapse-rate, and discount-rate assumptions.

1. Current Framework

Since the introduction of IFRS17 and K-ICS, insurance liabilities have been measured on a current-value basis, while surrender values continue to be determined under policy terms and regulatory rules rather than being remeasured on a current-value basis. This creates potential differences between the two. Under IFRS17 and K-ICS,

insurance liabilities are measured as the present value of future cash flows, reflecting actuarial assumptions such as mortality and lapse rates, as well as market interest rates. Surrender values, by contrast, are calculated based on policyholder reserves determined using the assumed interest rate specified in policy documentation, after deducting surrender charges capped by the standard surrender charge amount. Higher interest rates or front-loaded acquisition costs incurred at policy inception may therefore cause current-value insurance liabilities to fall below surrender values. The resulting difference is referred to as a surrender value shortfall.

The surrender value reserve addresses this shortfall by restricting the distribution of retained earnings by an amount equal to the shortfall. If retained earnings corresponding to the shortfall were distributed as dividends, an insurer could face difficulty paying surrender values in the event of mass lapses or liquidation. The reserve is not separately funded in cash; rather, the corresponding amount of retained earnings is appropriated to a non-distributable statutory reserve and excluded from distributable profits. As a result, the reserve can also limit the distribution of valuation gains arising from the accounting transition or higher interest rates.

As the reserve has grown, its impact on Tier 1 capital recognition, dividend capacity, and corporate income tax deferral has also become more significant. The industry-wide reserve rose from KRW 34 trillion in 2023 to KRW 53 trillion in 2025. In 2025, it accounted for 47% of life insurers' retained earnings and 45% of non-life insurers' retained earnings, exceeding 90% at some companies. Because the reserve operates through retained earnings, increases in the reserve may reduce recognized Tier 1 capital, constrain dividend capacity, and defer corporate income tax payments. A 2024 reform lowered the accumulation ratio to 80% for insurers meeting specified solvency thresholds, but the reserve has continued to grow.

2. Key Issues

Because surrender value shortfalls are managed through restrictions on retained earnings, the reserve is intertwined with dividend restrictions, Tier 1 capital recognition, corporate income tax deferral, and acquisition-expense management. Changes aimed at one objective may therefore have unintended effects elsewhere.

First, the reserve may reduce recognized Tier 1 capital even for insurers holding highly loss-absorbing capital. The portion of a surrender value shortfall exceeding the reserve is deducted in determining Tier 1 capital recognition and treated as supplementary capital for K-ICS purposes. This excess may include not only amounts that cannot be covered by the reserve due to insufficient retained earnings, but also amounts arising from differences between the reserve calculation basis and the K-ICS available capital calculation, including amounts equivalent to the contractual service margin, or CSM. As a result, recognized Tier 1 capital may decline even when an insurer holds substantial amounts of highly loss-absorbing capital, including common equity.

From 2023 to 2025, amounts treated as supplementary capital increased by KRW 13.1 trillion for life insurers and KRW 6.2 trillion for non-life insurers. Although the treatment does not affect total available capital, it reduces recognized Tier 1 capital. As the Tier 1 capital ratio requirement takes effect in 2027, the reserve's impact on Tier 1 capital recognition may become a direct capital-management burden.

Second, reserve accumulation may temporarily reduce corporate income tax payments because amounts appropriated to the reserve from retained earnings are tax-deductible. As this is a deferral rather than an exemption, a large reversal of previously accumulated reserves could cause the deferred corporate income tax burden to crystallize over a short period.

Third, because the reserve is excluded from distributable profits, its growth relative to retained earnings reduces dividend capacity. The reserve has the effect of limiting the distribution of valuation gains on existing contracts arising from the accounting transition or higher interest rates. However, as the accumulation requirement applies regardless of when a contract was written, reserves associated with new business accumulate as well, placing sustained pressure on dividend capacity.

Lastly, acquisition costs also affect the reserve. High front-loaded acquisition costs at policy inception may lower current-value insurance liabilities while surrender values remain largely unchanged, since the surrender charge cap is based on net premiums and the insured amount rather than actual acquisition costs. Therefore, higher acquisition costs may increase the reserve. Although this mechanism may create an indirect incentive to contain acquisition costs, its effectiveness has been limited, with acquisition costs continuing to rise, particularly for new business.

3. Reform Priorities

Reform should separate the different regulatory objectives currently tied to the surrender value reserve. In the short term, the existing framework could be retained while reserve accumulation requirements and Tier 1 capital recognition criteria are rationalized. In the long run, surrender value shortfalls could instead be managed through solvency and liquidity frameworks, separating policyholder protection from tax and dividend rules. Because the two approaches are not mutually exclusive, a phased approach combining near-term improvements with an assessment of longer-term reform is practical.

The current framework assumes the surrender of most in-force contracts and requires 80 to 100 percent of the resulting shortfall to be accumulated, depending on solvency ratios. By contrast, the solvency framework calculates the mass-lapse risk

charge using an extreme stress scenario in which 25 to 35 percent of contracts lapse simultaneously. In light of this difference, the reserve requirement could be gradually adjusted to a specified proportion of the shortfall rather than nearly the full amount.

The criteria for Tier 1 capital recognition of the excess portion of surrender value shortfalls should also be rationalized. Amounts arising from valuation differences between the reserve calculation basis and the K-ICS available capital calculation are currently treated as supplementary capital, partly because optimistic actuarial assumptions could be used to influence K-ICS ratios.

However, managing capital volatility arising from actuarial assumptions serves a different objective from securing surrender values. Such volatility could instead be addressed through guidelines on actuarial assumptions, validation of insurance liability adequacy, and clearer standards for calculating K-ICS available capital.

In addition, the solvency framework already treats mass-lapse-related declines in net assets as losses reflected in required capital. It is therefore worth reconsidering whether available capital should be deemed to have limited loss-absorbing capacity merely because part of it may fund surrender payments. One option would be to cap the amount of a surrender value shortfall that can be treated as supplementary capital for K-ICS purposes.

Over the longer term, surrender value shortfalls could be managed through solvency and liquidity frameworks by refining the mass-lapse risk charge within required capital and incorporating liquidity stress-scenario results into the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ORSA), liquidity management standards, and disclosures. Because these mechanisms may be less enforceable than the current reserve requirement, failure to meet specified thresholds could trigger risk-management improvement measures.

Reform should also address the corporate income tax burden, the prudential impact of capital outflows, and the management of expenses and actuarial assumptions. If

previously accumulated reserves are reversed, deferred corporate income tax could become payable over a short period, warranting transitional measures such as phased recognition of taxable income or installment tax payments.

Procedures should also ensure that solvency is not weakened if resources released through reform are distributed as dividends, for example through post-dividend solvency assessments. Because reserve levels are highly sensitive to expenses, lapse rates, and discount rates, any relaxation should proceed only if supervisory standards and validation procedures for these factors operate effectively.

Woosuk Choi, Research Fellow
woosukchoi@kiri.or.kr

Geonyoup Noh, Research Fellow
gynoh@kiri.or.kr